



글 김수란 정리 박선경 사진 오픈아카이브

일본과의 이견으로 갱신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어민 피해 보전, 대체어장 조사 등의 목적으로 2018년 10월 103억 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 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어떤 의미에서 훼손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일본의 일방적 구어업협정 파기와 신어업협정 체결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편의상 1965년에 체결한 어업협정을 구(舊)어업협정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구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양국 간의 상호 협력 아래 어업 발전과 선린 관계의 유지를 위해 맺어졌다. 하지만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채택되고, 한국과 일본 모두 1996년 이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된다. 이후 해양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해 바깥의 기선에서 200해리(1국제해리는 1nmile = 1,852m)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설치할 수 있다는 협약 내용에 근거해 일본이 EEZ제도를 선포하고 구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이 필요해짐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그해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1999년 1월 22일 양국 간의 비준서 교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당초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 2002년 1월 22일이었지만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도 협정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자동연장되는 탓에 지금까지도 이 협정은 유효하다.

## 한일어업협정의 핵심논란 중간수역

한일어업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양국은 상호 중첩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서 해양생물 자원 관리의 합리적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업 분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65년의 구어업협정을 기초로 이 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 설치 등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수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몇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찬반 논란과 함께 정부가 일본 측과 어설픈 협상을 펼쳤다는 비난도 받았다.

협정의 핵심 논란 대상은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수역을 양국이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고 중간수역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중간수역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영해·배타적 경제 수역을 훼손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의 표상인 독도를 훼손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한일어업협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붙은 어선의 모습



1998년 주한 일본대사 오구라 가즈오를 불러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에 대해 항의하는 유종하 외무부 장관(위) 한일어업협정 규탄시위(아래)

## 오히려 불리한 배제조항 설정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결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배제조항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으나, 거꾸로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않는 조항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한일 양국은 치열한 격론을 벌인 끝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협정문에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놓았다. 정부는 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 학자들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합의라기보다는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적용 범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합의란 것이다.

## 한일어업협정 배수진이 필요하다

일본은 수산 자원 고갈과 우리 측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이유로 자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 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자율로 진행하던 독도 부근 동해 중간수역 내 교대 조업 협의를 국가 간 입어 협상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중간수역은 대한민국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중간수역의 한국 정부 지위 훼손을 우려해서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 양국 경제 수역에서 상호 입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은 이제 단순히 경제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협상 결렬에 따른 피해는 태평양 어장을 가진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크다. 이런 약점을 아는 일본이 이미 합의한 갈치 어선 규모를 더 줄이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버티고 있다. 수년째 지속되는 협상 결렬의 화살은 결국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독도가 한국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화될 바에야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 진행된 한일어업협정 일지

한일어업협정 관련 일지
1965년 6월 한일어업협정(옛 협정) 체결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공식 발효, 각국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까지 인정
1998년 1월 일본, 협정 일방적 파기
11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선으로 삼아 논란
2016년 6월 김치연 서순우 등 이견으로 양국 간 어업협상 결렬(어업협상은 매년 갱신)
2018년 8월 해수부, 협상 교착 장기화 대비 어민 지원 예산 103억 원 신규 책정

1999년 1월 22일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과 오구라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어업협정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